
「서북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용역

결 과 보 고 서

2020. 12. 4.

기 관 명	대 표 자
사단법인 은평상상	부 미 경

제 출 문

서울시NPO지원센터장 귀하

본 보고서를 서울시NPO지원센터에서 위탁한 「서북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0. 12.

- 용역수행기관 사단법인 은평상상
- 사업책임자 민성환
- 사업실행자 부미경, 서호성, 오민조, 이한, 차해영

이 보고서는 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서울시NPO지원센터의 입장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이 보고서에 수록된 연구결과물을 인용할 때에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목 차

1. 사업개요	1
2. 사업추진내용	2
3. 사업평가	6
4. 사업운영평가	8
5. 사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8
[사진자료]	10
[첨부문서]	12

1. 사업 개요

사업명	서북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사업목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북권 시민사회 통합이슈 도출 • 서북권 중간지원조직 미션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 도출 • 서북권 시민사회 공론장 운영 역량 강화 	
사업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구 시민사회 단체, 기관 및 시민활동가 47명 • 마포구 시민사회 단체, 기관 및 시민활동가 20명 • 서대문구 시민사회 단체, 기관 및 시민활동가 15명 	
사업추진 내용	사업명	내용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 현장에서 배운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북권NPO지원센터 현장답사 1회 추진 • 동남권NPO지원센터 현장답사 1회 추진 • 권역NPO지원센터가 주는 시사점 도출 • 서북권NPO지원센터 준비와 관련한 지침 작성
	서북권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서대문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구 공론장 2차례 진행 -1차 : '20.11.05(목) 서대문구 근로복지센터 -2차 : '20.11.19(목) 서대문구 근로복지센터
	서북권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마포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포구 공론장 1차례 진행 - '20.11.03(화)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서북권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은평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평구 공론장 2차례 진행 - '20.11.04(수)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상상홀 - '20.11.16(월) 은평상상허브 즐거운소통
	서북권역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다! -통합공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대문·마포·은평구 통합공론장 1차례 진행 - '20.12.01(화) 온라인(Zoom)
사업기간	2020. 9. 1. ~ 12. 5. (3개월)	
사업비	11,000,000원(금일천일백만원)	

2. 사업추진 내용

1) 사업기획추진단 정례회의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방법: 정기회의 ○ 참여대상: 기획추진단 ○ 시행시기: 2020.09월~11월 ○ 시행횟수: 매월 1회 이상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 1차 추진단 기획회의 - '20.10. : 2차 추진단 기획회의 - '20.11. : 3차 추진단 기획회의
사업추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에 참여하는 수행자 중심으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일상적 소통을 진행함. ○ 방법과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차회의 : '20.09.04 온라인으로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별 사업참여자 인사나누기 + 세부사업계획, 지역별 역할분담 등 논의 - 2차회의 : '20.09.26 동북권NPO지원센터 현장답사와 병행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답사결과 공유 + 향후 일정, 역할 분담 공유 - 3차회의 : '20.10.19 동남권NPO지원센터 현장답사와 병행해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답사결과 공유 + 향후 일정, 역할 분담 공유 - SNS대화방(카카오톡) 개설·활용으로 일상적 논의, 정보공유, 소통 진행

2) 서북권 시민사회 중간지원체계 구상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방법: 선진사례 답사, 이해관계자 인터뷰, 분석 워크숍 ○ 참여대상: 기획추진단 및 선진사례지 이해관계자 ○ 시행시기: 2020.09월~10월 ○ 대 상 지: 광주, 대구, 대전, 경기, 제주, 서울(동북권, 동남권 등) 등 중간지원조직 ○ 시행횟수: 답사 2회, 워크숍 1회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 선진사례지 선정 및 추진계획 확정 - '20.09. : 선진사례지 1차 답사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 '20.09. : 선진사례지 2차 답사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 - '20.10. : 선진사례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워크숍
------	---

사업추진 세부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사례지 1차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 법 :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일 시 : 2020.9.26.(토) 15:00~17:00 -장 소 : 동북권NPO지원센터 -면담자 : 박영주(동북권NPO지원센터장) -내 용 : 동북권NPO지원센터 준비 및 조성 과정 권역의 시민사회 연대협력 구조 설명 지원센터의 활동방향과 내용 확인 등 ○ 선진사례지 2차 답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 법 : 현장방문 및 관계자 면담 -일 시 : 2020.10.19.(월) 10:00~12:00 -장 소 : 동남권NPO지원센터 -면담자 : 위정희(동남권NPO지원센터장) -내 용 : 동남권지역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 역사 동남권NPO지원센터 준비 및 조성 과정 설명 지역 시민사회 특성을 반영한 지원센터 활동전략 설명 등 ○ 분석 및 시사점 도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방 법 : 마포구 공론장(마포로컬리스트컨퍼런스)에서 발제 후 토론 -일 시 : 2020.11.3.(화) 10:00~12:00 -장 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회의실 -발 제 :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 -내 용 : 동북권, 동남권 시민사회와 서북권 시민사회의 연대협력 경험의 차이가 주는 시사점, 입지 선정의 중요성 등 시사점 도출 ○ 분석 및 시사점을 반영한 ‘서북권NPO지원센터 준비 지침’ 마련
--------------	--

3) 서북권 시민사회 이슈 및 과제 도출 공론장

사업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행방법: 토론회, 워크숍 ○ 참여대상: 추진기획단 및 서대문, 마포, 은평지역 시민사회 활동가 ○ 시행시기: 2020.09월~11월 ○ 시행횟수: 지역별 공론장 3회, 통합공론장 1회 ○ 추진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9. : 은평지역 이슈와 과제 도출 공론장 - ‘20.09. : 마포지역 이슈와 과제 도출 공론장 - ‘20.10. : 서대문지역 이슈와 과제 도출 공론장 - ‘20.11. : 통합이슈와 통합과제 도출 워크숍
------	--

사업추진
세부내용

- 마포지역 공론장 운영
 - 일시 : 2020.11.3.(화) 10:00~12:00
 - 장소 : 서울생활문화센터 서교 회의실
 - 형식 : 마포로컬리스트컨퍼런스 테이블 운영 - 발제와 토론
 - 내용
 - + 발제1 : 서북권 시민사회 현황과 특성(위성남-마포지역 활동가)
 - + 발제2 : 서북권NPO지원센터 추진경과와 타 지역 NPO지원센터 시사점(민성환)
 - 결과
 - + 서북권NPO지원센터추진을 위한 마포지역 논의와 추진단위 구체적 결성 필요
 - + 마포지역 주요 이슈(시민자산화 등)와 고민 논의 등

- 서대문지역 공론장 운영
 - 1차
 - + 일시 : 2020.11.05.(목) 19:00~21:00
 - + 장소 : 서대문구 근로복지센터(유진상가 3층)
 - + 형식 : 간담회
 - + 내용
 - *참석자들의 관심 분야 나누기
 - *서대문 시민사회에서 활동하는 소감 나누기
 - *서대문 시민사회의 현재 모습 진단하기
 - *서북권NPO지원센터의 역할
 - 2차
 - + 일시 : 2020.11.19.(목) 19:00~21:00
 - + 장소 : 서대문구 근로복지센터(유진상가 3층)
 - + 형식 : 발제와 토론
 - + 내용
 - *발제1 : 2019서북권NPO활동에 대한 연구와 서대문을 위한 제안(위성남)
 - *발제2 : 서대문협치의 가능성과 한계로 보는 서대문 시민의 활동(손정기)
 - *발제3 : 2020년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몇가지 단상(박준우)
 - *발제4 : 서대문 시민사회 현황과 활동가 욕구(이은주)

- 은평구 공론장 운영
 - 1차
 - + 일시 : 2020.11.04.(수) 16:00~18:00
 - + 장소 : 서울혁신파크 상상청 상상홀
 - + 형식 : 간담회
 - + 내용
 - *제5회 은평상상컨퍼런스 결과 발표
 - *제5회 은평상상컨퍼런스 최종 정리 방향 및 은평시민사회 공동선언문 방식 협의
 - *결과 정리 및 공동선언문 도출을 위한 워크숍 추진 논의

-2차

+ 일시 : 2020.11.16.(월) 10:00~12:00

+ 장소 : 은평상상허브 '즐거운소통'

+ 형식 : 워크숍

+ 내용

*제5회 은평상상컨퍼런스 결과 공유

*제5회 은평상상컨퍼런스 개막식 및 개별의제테이블 결과 공유

*각 의제테이블별 핵심가치 도출

*은평 시민사회 공동 핵심가치 도출 : 기후위기대응, 돌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

*은평시민사회공동선언문 작성을 위한 향후 일정 및 역할 분담 논의

○ 서대문·마포·은평 통합 공론장 운영

-일시 : 2020.12.1.(화) 14:00~16:00

-장소 : 온라인토론회(Zoom)

-형식 : 발제와 종합토론

-내용

+ 서대문, 마포, 은평의 공론장 운영 결과 공유

+ 서대문, 마포, 은평의 시민사회 이슈, 의제, 고민 등 논의

+ 서북권 시민사회 또는 서북권NPO지원센터에 바라는 점, 방향 등 논의

+ 향후 활동에 대한 제안과 토론

○ 서북권 시민사회 공동 이슈, 과제 및 향후 계획

-공동 이슈와 과제

+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시민사회 활성화는 공동 과제

+ 협치, 마을, 주민참여 정책을 통한 시민의 등장을 시민사회 확장과 활성화로 어떻게 연결한 것인가.

+ 시민사회활동가의 발굴, 양성, 성장지원, 일자리 제공 등 활동생태계 구축

+ 기후위기, 불평등위기 등 당면한 전사회적, 전지구적 문제에 대응

-향후 활동 계획

+ 가칭)서북권NPO지원센터추진위 구성에 대한 합의

+ 가칭)서북권시민사회(NPO)활력포럼 운영 합의

+ 가칭)서대문구시민사회활성화씨앗모임 구성 제안

+ 마포로컬리스트컨퍼런스, 은평상상컨퍼런스, 서대문구공론장 공동 활용 제안 등

3. 사업평가

1) 사업결과

사업명 +	정량지표	사업결과
사업기획추진단 정례회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정례회의 3회 (월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온라인 정례회의 1회 진행 선진사례지 답사와 견학 회의 2차례 진행 SNS대화방 운영을 통한 수시 논의
서북권 시민사회 중간지원체계 구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 모범 사례지역 2곳 답사 국내 사례지 이해관계자 인터뷰 기본지침서 1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울동남권NPO지원센터 1회 답사, 인터뷰 서울동북권NPO지원센터 1회 답사, 인터뷰 답사결과 시사점보고서 작성 서북권NPO지원센터 조성 지침(안) 작성
서북권 시민사회 이슈 및 과제 도출 공론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숙의공론장(토론회 등) 4회 실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역별 공론장 3회 통합 공론장 1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대문구 공론장 2회 운영 은평구 공론장 2회 운영 마포구 공론장 1회 운영 통합 워크숍 1회 운영

2) 사업성과

○ 서북권 시민사회 중간지원체계 구상

- 권역별로 조성된 NPO지원센터 현장답사와 관계자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 막연하게 연상하고 있었던 서북권NPO지원센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음.
- 중간지원조직 조성을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회의 주체적 준비가 구체적으로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북권과 동남권은 서북권과 달리 초기 준비단위가 상대적으로 탄탄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는 사업에 참여하는 단위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줌.
- 분석 및 시사점을 반영한 ‘서북권NPO지원센터 준비 지침’ 마련

○ 서북권 시민사회 이슈 및 과제 도출 공론장

- 지역별 공론장을 통해 각 지역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 현 주소와 주요 이슈, 의제 등을 진단하고 확인하는 자리는 매우 의미 있었음. 이를 통해 자치구 단위를 넘어서는 공동 이슈와 의제, 개별 자치구가 갖는 다양성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런 욕구와 다양성을 담아내는 것이 향후 서북권NPO지원센터의 비전과 미션이 되어야 함을 확인한 것 또한 성과라 볼 수 있음.
- 권역별 시민사회 바라보기라는 새로운 관점을 마련할 수 있었던 점도 중요한 성과라고 볼 수 있음.
- 무엇보다 이후 지속적인 만남과 활동(가칭)서북권NPO지원센터추진위원회, (가칭)서북권시민사회(NPO) 활력포럼을 통해 서북권 시민사회의 연대와 협력 틀을 구체화하자는 향후계획 확인과 합의가 본 사업의 핵심적인 성과라 판단함.

서북권NPO지원센터 준비 지침(제안)

① 조성 전 준비사항

- 서북권(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단위 시민사회 공동 준비단위 구성 필요.
- 동북권, 동남권과 달리 권역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 경험이 적은 서북권의 경우에는 특히 사전 준비단위 구성과 숙의·공론 과정 준비 중요.
- 이런 과정이 최소 1년 전부터 준비되는 것을 제안함.

② 조성 시 고려사항

- 센터 입지는 어디로 정할 것인가?
 - ☆ 접근성이 용이한 지역
 - ☆ 시민사회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필요한 지역
 - ☆ 적정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
- 센터에 설치해야 할 필요시설
 - ☆ 사무공간
 - ☆ 교육공간 : 최대 50명 규모 수용 가능 면적 고려
 - ☆ 회의공간 : 5~10명 규모 최소 2개 이상 확보
 - ☆ 휴게공간
 - ☆ 자료실(아카이브 공간)
 - ☆ 온라인 송출 공간 : 비대면 온라인 교육, 화상회의 등
 - ☆ 기타

③ 운영 시 고려사항

- 서북권을 아우르는 의사결정단위와 구조 확립
- 시민사회 자율성·독립성 확보를 위한 시민사회 독자재원 마련 및 지원 구조 확립

4. 사업운영평가

1) 사업 추진 체계

- 본 사업을 위해 서대문·마포·은평의 활동가로 사업기획추진단정례회의를 구성하고 각 자치구별 공론장은 정례회의에 참여하는 지역활동가가 책임지고 진행하는 형태로 사업 추진 체계를 구성하고 사업을 진행하였음. 이런 체계구성은 지역활동의 고유성과 주체성을 고려한 시도였으며 나름대로 적절하였다고 판단됨. 이로 인해 지역 공론장 운영도 코로나19 등의 외부변수가 있었지만 큰 무리 없이 진행되었다고 보임.

2) 과정평가

- '19년에 진행된 서북권 시민사회 현황연구를 공동 진행했던 서대문, 마포, 은평 활동가들이 주체가 되어 한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서북권시민사회 네트워크 사업 필요성과 주제를 결정하였음.
- 사업의 진행 방식 역시 자치구 시민사회 공론장을 운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통합공론장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참여주체들이 일정정도 역할분담과 책임감을 갖고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였음.
- 짧은 기간과 소규모 예산이라는 한계로 좀 더 확장된 형태의 공론장 운영, 좀 더 깊고 넓은 지역 시민사회 공감대와 참여 형성에는 일정정도 한계가 있었다고 보이나, 서북권 시민사회라는 틀로 지역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서북권NPO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전략에 대한 공감대 형성, 추진 기틀 마련이라는 소기의 성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의미 있는 사업이었다고 평가함.

5. 사업의 효과 및 향후 계획

- 본 사업을 통해 서북권 시민사회 활성화에 대한 공감대를 일정 정도 형성하였다고 봄.
- 또한, 서북권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과 역할,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주요한 임무에 대한 대략적인 상을 그릴 수 있었음.
 - 서대문구 : 협치, 공동체, 주민참여 등의 정책영역에서 등장한 시민들의 연결과 이를 통한 시민사회 공간 형성과 확장 등. 사업 공론장 과정에 참여한 활동가를 기초 단위로 '가칭'서대문시민사회씨앗모임' 구성 제안
 - 마포구 : 시민자산화의 연착륙, 새로운 시민활동가의 발굴, 성장지원 등의 과제 지원, 협력 등.
 - 은평구 : 포괄네트워크 활성화, 은평시민사회 비전 실현 지원, 협력 등.
- 서북권 지역사회의 공동 과제 존재의 확인 그리고 공동 과제 해결의 필요성 확인.
 - 마을시민사회 활성화의 필요성.
 - 기후위기시대의 극복을 위한 공동 대응.
 - 시민활동가 발굴, 성장 지원 등
- 사업 이후 지속적인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계획 확정.

- ‘가칭) 서북권NPO지원센터추진위원회’ 구성키로 함.
- + 서대문구, 마포구, 은평구 시민사회별 대표성 위임받은 3인으로 총 9인의 위원회 이튼 시일 내에 구성키로 함.
- + 사업과정에 참여했던 활동가를 기초 단위로 정보교류, 의제 논의, 역량 강화 등을 목적으로 하는 ‘가칭)서북권시민사회(NPO)활력포럼’ 을 운영키로 함.

[사진자료]



동북권NPO지원센터 간담회 (9.26)



동남권NPO지원센터 간담회 (10.19)



동남권NPO지원센터 간담회 (10.19)



마포구 공론장 (11.3)



서대문구 공론장 (11.6)



서대문구 공론장 (11.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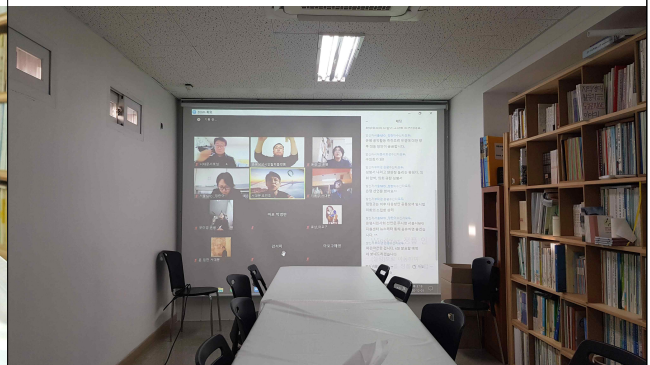
은평구 공론장 1차 모임 (11.4)



은평구 공론장(워크숍) (11.16)



서북권 통합공론장(노트북 화면) (12.1)



서북권 통합공론장(스크린 화면) (12.1)

동북권, 동남권NPO지원센터의 앞선 사례 시사점

1. 동북권NPO지원센터

1) 개요¹⁾

-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의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18년 설립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임.
- 서울시 동북권 5개 자치구(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 풀뿌리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익활동을 촉진함.
- 운영원리
 - 비전 : 동북권 공익활동가들의 놀이터
 - 미션 : 공익활동 지원을 통한 풀뿌리시민사회 활성화
 - 핵심가치 : 자치, 협력, 혁신, 성평등, 공유
 - 운영원칙 : 책임성, 현장중심(지역성), 자율성(독립성, 다양성), 정보공유(투명성, 개방성), 민주적 조직운영

2) 사업 추진방향

- 동북권 풀뿌리시민사회가 도전하고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
-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의제를 이끌어내고 소통의 장을 마련함.
- 지속적인 역량개발을 지원하여 동북권 시민사회의 잠재력을 일깨움.
- NPO의 비전과 미션을 실현시키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함.
- 서로의 활동에 감동하고 자극받으며 변화의 틈새를 만드는 연대를 이어감.

3) 지원사업

- 공익활동 실험실 : 이슈 발굴부터 공익활동 실행까지 분야와 실행방식에 대한 제한 없이 공익활동을 지원(동북권 공익활동가 3인 이상의 모임 또는 단체)
- 고유목적사업 프로젝트 : 단체를 만든 첫 마음들이 하고자 했던 고유목적사업을 지원함(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등록단체)
- 동북권NPO 공론장 운영 : 동북권 시민사회의 새로운 공공 의제를 발굴하고 해결하기 위한 공론의 장을 만들어감.
- 동북권NPO 작은연구 : 동북권의 다양한 문제를 주민과 활동가가 스스로 연구하여 의제를 도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지원함.
- 동북권 시민교육 : 동북권에 소재한 모임 또는 단체가 NPO 활동가를 대상으로 무료 개방하는 공익적 주제와 목적의 강좌를 개설하여 진행함(동북권 연구 주제를 가진 누구나).

1) 서울시 동북권 NPO 지원센터 홍보 리플렛

- 동북권 아카이브 : 동북권 5개 자치구의 정보(단체, 의제, 인물, 공간, 역사, 활동 등)를 모아 동북권 정보 플랫폼의 기능을 수행함(동북권에 대한 정보를 가진 누구나).
- 분야별 네트워크 : 동북권의 단체 간 네트워크 사업을 지원함. 연대활동으로 즐겁고 의미 있는 네트워크 활동의 기회를 마련함(비영리민간단체(고유번호증 소유 임의단체도 가능).
- 모임연습실 : 노원, 도봉, 강북, 성북, 중랑구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작은 모임을 지원함. 모임을 통해 새로운 활동가들의 등장과 기존 활동가들의 활력 충전을 기대함(개별 자치구 모임 또는 2개구 이상 연합모임).

4) 대관사업

- 라운지 : 10~20명 / 평일 : 오후5시~오후9시, 토요일 : 오전10시~오후5시
- 시설물 : 의자, 테이블, 정수기, 냉난방, 화이트보드
- 회의실 : 10명 / 평일 : 오전9시30분~오후9시, 토요일 : 오전10시~오후7시
- 시설물 : 의자, 테이블, 정수기, 냉난방, 화이트보드, 벽면보드
- 교육장 : 20~40명 / 평일 : 오전9시30분~오후9시, 토요일 : 오전10시~오후5시
- 시설물 : 의자, 테이블, 정수기, 냉난방, 화이트보드, 빔프로젝터, 스크린



□ 사진. 동북권NPO지원센터 간담회 모습 ('20.9.26)

2) 시사점

- 권역NPO지원센터 조성 전부터 동북권지역 시민사회단체의 연대 협력 역사가 있었고 이렇게 형성된 지역역량이 자연스럽게 권역NPO지원센터를 주체적으로 준비한 점.
- 넓은 권역을 아우르다보니 센터를 어디에 조성해야 하는지도 자치구별 센터 이용도에 영향을 미침.
- 코로나19로 인해 시민사회가 시민과 소통하는 방식의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한 시점임. 이를 지원하는 공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자치구 단위를 넘어서는 새로운 의제를 설정하기 보다는 기존 자치구 단위의 의제와 실행조직을

- 중심으로 타 자치구 이해관계자를 연결하고 확장하는 전략이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는 점.
- 중간지원기관으로서 센터 운영은 행정적 준비가 기본인 점.
- 권역 내 행정과 파트너십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는 점(각 구의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과의 스킨십 필요).
- 의제별 공모 지원 방식으로 지원하고 인큐베이팅하는 전략도 고려할 필요 있음.
- 풀뿌리단위 비영리조직의 행정 실무 역량이 낮은 점을 고려해, 행정 실무를 센터가 담당하고 비영리조직은 실제 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하는 방안이 주는 장점과 단점.
- 센터는 촉진자로서 역할이 중요하고 사업기획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민 조직 활성화 정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임.

2. 동남권NPO지원센터

1) 개요²⁾

-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 시민공익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20년 설립된 서울시 민간위탁기관으로 (사)커뮤니티허브공간이 수탁운영하고 있음.
- 서울시 동남권 4개 자치구(서초, 강남, 송파, 강동) 지역의 풀뿌리 시민사회의 성장을 통해 지역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공익활동을 촉진함.
-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는 공익활동에 관심 있는 시민과 단체 모두를 지원함.
- 주소 :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215, 3층
- http://blog.naver.com/sse_npo
- <http://www.facebook.com/ssenpocenter>

2) 주요사업³⁾

- 동남권NPO지역기반 구축
 - 시민사회 정보 및 자원을 공유하고 동남권의 활동의제를 모아 공익생태계 확장에 기여함.
 - + 동남권 NPO 임팩트스토리 발굴 및 자료 아카이빙
 - + 블로그, SNS운영 : NPO 활동 홍보 플랫폼
 - + 동남권NPO지원센터 찾아가는 설명회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교육 및 워크숍으로 동남권 활동가들이 보다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함. 또한, 예비활동가 NPO학교를 통해 미래의 동남권NPO활동가들을 길러내고 동남권NPO활동의 기반을 확장함.
 - + 공익활동가 역량강화
 - + 동남권 4개구 활동가 공동 워크숍
 - + 예비활동가 NPO학교
- NPO 네트워크
 - 자치구별 워킹그룹 운영을 통해 동남권 NPO특성에 맞는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자치구별 공동의

2) 서울시 동남권 NPO 지원센터 홍보 리플렛

3) 上同

제 발굴 및 공론장 운영을 통해 동남권 NPO의 네트워크 구축, 역량강화에 기여함.

- + 동남권 NPO 공론장
- + 자치구별 워킹그룹 운영
- NPO 사업지원
 - 지역의 다양한 의제를 기반으로 한 사업지원과 정책연구, 활동가들에게 회의나 활동을 위한 공간을 제공함.
 - + 동남권 NPO 사업 지원
 - + 단체운영 기본 역량 지원
 - + 풀뿌리 NPO 공익활동 공간 지원
 - + 동남권 NPO 정책조사 연구

3) 공간안내

- 교육장 : 50~100명 규모(의자만 놓을 시 70명 규모)
- 회의실 : 10~15명 규모
- 평일에는 09:00~21:00, 토요일에는 10:00~17:00까지 운영.



□ 사진. 동남권NPO지원센터 간담회 모습 ('20.10.19)

4) 시사점

- 센터 출발의 중심이었던 모법인의 회원들의 운영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여 현재는 운영 방향에 동의한 회원이 모법인의 중심이 됨
- 센터 출범 이전 함께 해온 회원들의 활동 역량이 모두 담기지 못하고 개인의 성향에 따라 분리되는 아픔
- 센터 출범을 위해 각 자치구 단체들과 협력을 하려해도 반감을 가진 단체들이 있었고 그들과 협력을 포기하고 출발했으나 출범후 몇몇 단체들이 항의 방문하여 자신들이 있는데 센터가 왜

나서나 등등 갈등이 있음

- 각 자치구의 시민사회의 역할과 역량을 어떻게 키워나갈지의 고민
- 센터 출범 후 모법인이 미래 지향적으로 해야 하는 일과 센터의 역할이 겹치지 않도록 의제를 선정해야 하는 어려움
- 장기적 관점에서 센터는 지역 연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

3. 사례연구가 서북권NPO지원센터 조성에 주는 과제와 시사점

- 동북권지역, 동남권지역 모두 NPO지원센터 설치 논의가 진행되기 전부터 자치구를 넘어서는 권역단위 시민사회 연대, 협력 활동의 경험과 역사가 있었음. 그래서 자연스럽게 권역별NPO지원센터를 논의하고 준비하는 단위가 형성되어 있다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 있음. 이와 달리 서북권은 자치구별 시민사회 활동을 넘어서는 권역단위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의 경험과 논의단위가 전무한 상태임. 이는 서북권NPO지원센터를 주체적으로 받기 위한 단위를 어떤 구조와 형태로 준비할 것인가라는 핵심 과제를 던져주고 있음. 구체적으로 관설민영으로 운영될 서북권NPO지원센터를 어느 단위가 수탁할 것인지, 그리고 그 단위를 어떻게 구성하고 준비할 것인지 등을 시급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음. 수탁단위 형태는 크게 두 가지로 구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첫 번째 안은 마포-서대문-은평 시민사회를 아우르는 법인체를 새롭게 신설하는 방안임. 두 번째는 마포-서대문-은평 시민사회에 존재하는 포괄네트워크 법인체 중 한 곳을 대표 수탁단체로 선정하여 수탁하는 방안임. 다만, 이 경우에는 대표단체의 의결기구가 마포-서대문-은평 시민사회를 아우를 수 있도록 해서 공동으로 논의하고 공동으로 참여하며 공동으로 책임지는 등의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해야 함.
- 넓은 권역을 아우르다 보니, 어디에 센터를 입지시키느냐 하는 것도 고민이 필요함.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시민사회의 참여가 높고 나쁜 지역일수록 참여가 낮은 것은 당연한 현상임. 동북권, 동남권 모두 예측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능한 평등한 접근성을 고려한 고민의 흔적이 보임. 다른 한편으로 자치구별 시민사회의 활성화 정도를 고려해 활성화 필요성이 높은 지역을 선택해 센터를 입지시키고 이를 통해 시민사회 활성화를 견인하는 전략도 고민해 볼 수 있으며 이는 권역 시민사회 간 논의와 합의가 전제되어야 할 것임.
-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중요한 과제 중 하나임. 필요한 공간기능이 무엇인지 정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고 그 기능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면적이 필요한지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되어야 함. 동북권은 회의실, 휴게실, 자료실 등 기본 공간구성 이외에 코로나19로 인해 비영리조직의 비대면 활동방식이 많아질 것을 예측하고, 비대면 활동과 소통을 지원하는 시설과 공간을 적극 반영하였고, 동남권은 사무공간 마련이 쉽지 않은 비영리조직의 특성을 고려해 공동사무실(Co-office) 공간을 적극 조성하는 등 나름대로 공간 전략을 고민한 것으로 보임. 서북권도 이런 측면에서 공간 구성과 관련한 구체적인 논의와 계획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현재 NPO지원센터는 관설민영의 형태임. 행정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보니 행정과 시의회의 선의에 따라 예산의 규모나 내용이 영향을 많이 받는데 전반적으로 예산 규모나 적정선에서 부족한 게 현실임. 따라서 부족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는 보완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해 보임. 더 나아가 이런 보완책이 수탁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일정 정도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면 금상첨화라 생각함.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수탁단체나 권역의 시민사회가 공동으로 미션 재원을 마련하고 센터 운영에 지원하는 구조를 생각해 볼 수 있겠음.

시민사회의 재정적 기여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함.

- 센터의 비전과 핵심미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와 그것을 실현하는 방법론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는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임. 동북권과 동남권은 권역이 갖고 있는 시민사회 역사성과 특성을 감안해 다른 방식의 지원전략을 선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북권을 구성하고 있는 각 자치구별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토대로 맞춤형 목표와 전략수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세 지역 시민사회 발전 경로가 다르고 현 시민사회 지형이 크게 다른 부분이 있어 이를 정확히 해석하고 의제를 발굴, 지원하는 방안 마련이 필수적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역을 아우르는 공동 의제와 목표는 존재하며 이를 숙의공론을 통해 도출하는 과정 설계가 중요할 것으로 보임. 이런 공동의제, 목표와 관련해서는 작년 시행한 연구 과정에서 일부 논의되었던 바가 있음. 이를 핵심어로 정리해 보자면 다음과 같음.
 - 기후위기대응, 전환마을(도시), 자원순환경제, 공동체돌봄, 마을전환교육공동체
 - 마을시민사회, 동단위 자치분권

[첨부분서 2] - 서대문구 공론장 발제문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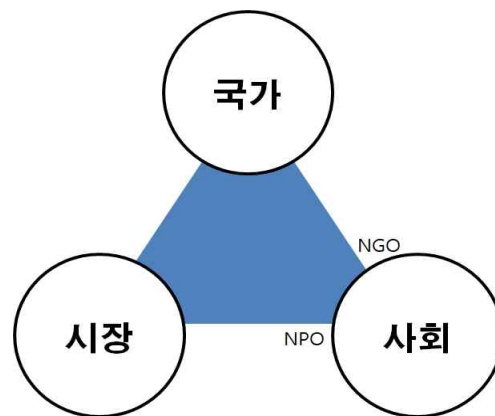
* 마포구 공론장에서도 동일한 내용으로 발제

2019년 서북권 NPO 활동에 대한 연구(요약)

위성남_(사)마을 고문

세 개의 기둥 : 국가, 시장, 사회

- '세 개의 기둥'은 '(시민)사회'를 바라보는 기본 프레임을 제공하고 있다.



- 개념의 유래 : '칼 폴라니'(Karl P. Polanyi, 1944)로부터 비롯. 사회(society)란 전통, 문화, 관습, 제도, 조직, 커뮤니티(communitiy), 생활경제(economy of livelihood) 등의 영역. 사회란 자연적인 귀속집단(가족이나 혈연공동체), 의도적인 결사체, 비규정적이며 느슨한 커뮤니티를 포괄
- 이 기본 개념 속에서 '시민사회'란 개념으로 확장. NGO와 NPO의 개념으로 연결
-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 UN이 창설된 1945년에 처음 사용. 유엔(United Nations)은 '정부간기구'인데, 유엔 창설을 논의하는 자리에 비정부기구가 회의에 참석하는 것에 대해 이를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사용됨. 즉 Three Pillars 중에서 '국가'와 관련지은 개념 설명임
- NPO(Non-profit organization). Three Pillars의 '시장'에 대비한 개념 설명임. "소유주나 주주를 위해서 자본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 대신에 그 자본으로 어떠한 목적을 달성하는 단체"를 의미

한국 시민사회 형성의 역사

- '시민사회' 일반과 '지역 시민사회'(또는 지역사회)의 개념
- '지역사회' 형성의 두 가지 측면 : 첫째 '관변단체'의 형성과 역사, 둘째 풀뿌리 주민운동 또는 시민운동의 흐름.
- 첫째, 한국의 '관변단체' 또는 관변운동 : 1970년대 정부 주도의 국민캠페인이었던 새마을운동에서부터 비롯. 새마을운동은 1970년 1월부터 농촌지역에서 새마을가꾸기라는 명칭으로 시작되었으며, 그 이후 직장새마을운동 단계를 거쳐, 1975년 통반장제 실시와 반상회 개최를 중심으로 한 도시새마을운동을 정

점으로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완성됨. 1990년대 지방자치제도의 시행은 기초 행정단위에서 이들이 선출직으로 전면 진출. 2000년대 전국적으로 시행된 ‘주민자치위원회’에 위원으로 임명된 수십만 명의 주민들은 이러한 오랜 과정을 통해 형성된 지역사회의 새로운 ‘주체’들

- 둘째, 1980년대 한국의 민주화운동의 역사와 함께 형성된 흐름. 1970년대부터 풀뿌리 주민운동의 흐름이 이미 독자적으로 형성되고 있었으며, 그것은 ‘민중운동’이라는 이름으로 명명. 1980년대에는 민중운동의 흐름에 이데올로기적 성격이 강해지면서 ‘계급운동’으로 등장. 1980년대 후반에 전혀 새로운 개념의 ‘시민운동’이 등장. 1990년대 중반, 서울지역에서는 자치구 단위, 즉 풀뿌리 단위에서 시민운동을 전개하는 흐름. 2000년대에 ‘생태적 대안사회운동’ 등장, 생협, 대안학교, 생태주민운동, 마을공동체 등.

지역 시민사회

- ‘지역(Local) 시민사회’와 행정구역으로서의 자치구라는 활동 범위
- ‘모두마포’와 ‘은평상상’이 갖는 성격 : 첫째 행정에서 배분하는 자원을 둘러싼 민간의 대응 노력에서 비롯되었다는 측면. 모든 개별적 이슈의 네트워크는 행정의 자원배분과 관련되어 있다. 둘째 민간의 적극적 대응 노력의 산물.
- 시사점 : ‘시장’과 ‘국가’의 관계 설정 대신에 ‘사회’와 ‘국가’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
- 이후 전망 : 그동안 ‘지역 시민사회’가 포괄하고 있지 못하는 범주에서의 활동에 대한 문제. 즉 기존의 ‘관변단체’가 적극적으로 진출해 있는 동(洞) 단위 지역사회에서의 활동을 어떻게 모색할 것인가. 현실적으로는 ‘주민자치회’에 대한 적극적 관심과 참여의 여부.
- 2020년대를 이끌고 갈 새로운 프레임과 비전이 무엇일까?

주민과 시민의 구분

- 주민활동의 영역과 시민활동의 영역은 개념적으로 구분됨
- 시민활동(또는 시민운동)의 영역 : 다중의 이해관계에 있는 사안이거나 공공적 사안에 대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이슈’(Issue)로 정립하고 대응하는 일련의 행동을 의미. 행정의 정책이나 의회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 여론에 호소하거나 문제의 원인과 해결의 당사자에게 직접 항의하기도 한다.
- 주민활동(또는 주민운동) : 커뮤니티(Community) 개념과 연결. 주민(Resident)은 거주지 생활자를 의미하며, 주로 지리적 범주 안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을 의미한다. 생활권(生活圈)을 구성하며, 그 안에서 발생하는 생활상의 문제와 연결된다. ‘주민’은 주로 ‘생활’과 ‘사람들의 관계망’과 연결되는 개념이다. 다른 측면으로 거주자들은 유권자를 의미하며, 공적인 의사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서북권 시민사회 역사

<마포구>

2000년대 10년 동안 각기 독자적으로 발달해온 다양한 흐름이 점차 연결되기 시작했다. 2003년도 풀뿌리 시민단체로 출발한 '마포연대'를 중심으로 다양한 흐름이 구체적인 이슈와 이벤트를 중심으로 연결되었다. 그 과정에서 성미산마을이 등장했고, 공동체라디오방송국이 만들어졌으며, 2008년도 민중의 집을 중심으로 성소수자운동과 상인회가 연결되고 지역의 커다란 이벤트가 기획되었다. 또한 2010년대 초에 등장한 흥대앞 두리반철거반대, 견고싶은거리 지하주차장반대, 홈플러스입점반대 등 대형 갈등 이슈가 등장했고, 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2013년부터 서울시의 혁신정책을 계기로 전혀 새로운 국면이 조성되기 시작했다. 각종 중간지원조직이 형성되었으며, 이에 따라 대규모 활동들이 발생했다. 또한 전혀 새로운 현상인 '젠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여 지역 활동의 전망을 어둡게 했다. 분야별 혁신정책은 주제별 네트워크 조직으로 정착되었으며, 민간단위에서는 포괄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었다. 지역 시민활동은 규모면에서 확대되었고, 주제에서도 보다 체계화 되었다. 그러나 동단위 주민생활권으로 확산되기에는 아직도 역부족이었다.

<서대문구>

○ 씨앗들 : 2010년 이전

- 전국단체인 '나라사랑청년회'(1988년 창립)와 '장애인부모모임'인 '함께가는 서대문장애인부모회'(2008년 창립)를 제외하면 규모 있는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없었다.

○ 새로운 움직임 : 2010~2012년

- 2010년, 풀뿌리 여성주의 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 '너머서'가 서대문지역에서 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이 무렵부터 지역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모색
- 2012년 이후, 지역활동을 전제로 한 시민사회단체 설립되거나 서대문으로 이주하기 시작했다.
- '사랑나눔자원봉사센터'(대표 김혜미, 2011년 창립)
- '서대문희망네트워크'(대표 양리리, 신성은, 2011년 창립)
- '참교육을 위한 학부모회 서부지회'(대표 송성남, 2012년 창립)

○ 경쟁 : 2012~2014년

- 2013년, 거북골사랑방 탄생
- 2013년 3월, '서대문마을넷'이 창립. 이후 '서대문사람숲' 내부에서 말랑센터 운영진을 놓고 이견이 제기. 2015년 5월에 위탁이 종료
- 서대문희망네트워크(약칭 서희네)의 활동 중단 : 너머서, 참교육학부모회 서부지회, 서대문도서관친구들, 피스빌리지네트워크, 탁틴내일 등 당시 서대문구에서 지역활동을 하는 거의 모든 단체들이 모여 만든 네트워크 연합체, 그러나 정치참여에 대한 견해차, 새로 마련된 일자리 배분의 실패, 일부 단체의 정보 및 집행력 독점 등으로 인해 내부에 이견이 발생, 결국 중단

○ 각자도생 : 2014년 이후

2012년 이후 여러 혁신정책에 힘입어 여러 시민모임이 대거 등장하였다. 그러나 민-민 간의 협력을 통

해 행정에 대한 민간의 협상력을 키우기보다는 서로 간의 경쟁이 심해지는 현상이 발생했다.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행정에서 공급되는 자원을 둘러싼 경쟁처럼 여겨질 수도 있었다. 시민단체가 행정의 보조금에 대해 높은 의존도를 갖게 되면 자신의 독자성을 상실하고 행정의 눈치를 보게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행정의 속도, 즉 예산 집행방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운동의 독자적 속도와 일의 방식이 사라지고, 행정의 속도(보조금의 속도)와 집행방식에 압도당하기 때문이다. 역량 있는 시민세력이 형성되지 못하고, 그나마 부족한 민간활동 단위들 사이의 협력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그 결과 행정주도성이 강화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은평구>

○ 새로운 시작 : 1996~2003년

1996년 공동육아협동조합인 ‘소리나는어린이집’을 개원한 이후로 젊은 사람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1998년 ‘생태보전시민모임’이 창립된 것을 계기로 1990년대 후반 은평지역에서 풀뿌리 NPOs 창립과 활동이 시작되었다.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을 목표로 한 NPOs 연대활동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되었다. 2000년에 창립한 열린사회은평시민회는 동 단위에서 마을만들기 활동을 전개했다. 갈곡리에서의 활동은 ‘알뜰장터’, ‘어린이잔치 한마당’과 같은 작은 행사를 중심으로 서로 협력하여 진행하였다.

○ 성장과 분화 : 2003~2007년

공동 연대사업 과정에서 좀 더 폭넓게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2004년 11월에 소수의 풀뿌리단체 연대모임인 ‘은평마당’을 구성하였고, 이후 2005년 1월에 ‘은평연대’(아름다운은평을위한연대)를 발족시킴으로서 이 ‘은평마당’은 발전적으로 해소하였다. 은평연대는 폭넓은 지역사회 풀뿌리 NPO의 참여를 기반으로 하는 강력한 연대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2년이 지난 뒤인 2007년 2월에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은지네)’를 창립함으로써 또 다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기획이 가능하였고, 의제 설정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이는 지역활동이 한 단계 성숙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 활동 영역의 확장 : 2008~2016년

문화, 교육, 환경, 장애인 등 다양한 분야별 시민사회 영향력을 확장하였고 그 결과로 분야별 네트워크(연대체)를 창립할 수 있었다.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 은평협동조합협의회, 은평시민정치네트워크, 장애인이 살기좋은 은평을 만드는 사람들, 은평학부모네트워크,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작은도서관협의회 등이 그것이다. 또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폭발적 증가로 사회적경제 영역이 크게 확장되었다. 또한 서울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정책과 맞물려서 은평 마을단위 공동체 조직과 마을기반 활동가들이 성장하였다.

2013년 2월에 ‘(사)은평상상’ 창립총회가 개최되었다. 이는 그 동안 꾸준히 성장하였던 여러 민간활동역량들이 모인 포괄적인 네트워크였다.

○ 전환 모색 : 2016년 이후

시민사회는 크게 확장하였다. 이와 동시에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은지네)’의 미션과 위상에 대한 새로운 정립이 요구되었다. 활동이 성장함에 따라 그에 맞는 틀을 새롭게 구성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은평지역사회네트워크’의 발전적 해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새로운 형태와 운영 원리를 갖는 ‘(가칭)시민협력플

랫폼'을 구상하였다. 이제 활동 조직은 '플랫폼' 개념을 본격 도입하는 시점에 다다랐다고 보았다. 또한 협치의 전면화를 위한 한 단계 성장한 민관협치 기반을 마련하는 과제가 주어졌다.

서북권 시민사회 생태계 주요 특징

- 자치구 단위로 활동이 구획되어 있음. 자치구를 넘어선 연대와 협력의 경험이 없음. '권역'의 개념이 없음
- 2017년 자치구 단위 지역 시민사회가 '포괄적 네트워크'로 결집하여야 한다는 보편적 요구를 받았고,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자치구 '시민협력플랫폼'의 조력으로 자치구 단위의 포괄적 네트워크 구성이 촉진되었다.
- 2020년대를 맞이하면서 이후 10년 동안 어떤 방향으로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할지 고민해야. 풀뿌리 시민사회는 자치구별로 구획되어, 상호 독립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게 바람직한지는 이제 논의해야 한다.

<마포지역>

- 마포지역 활동가들은 제도개선과 정책개발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이는 '마포연대'와 '민중의집'이라는 전통적 풀뿌리 시민단체의 성장과 실패를 보면서, 당사자 욕구 중심의 자연발생적인 흐름과 연결을 더 중요시 하는 견해가 있었다.
- 2015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목도하면서 근본에 있어서 위기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당사자들이 등장하고 서로 연결하면서 자연스런 네트워크를 형성해 간다는 생각은 자신의 활동 근거지에서 쫓겨나게 되어버린 상황에서 매우 무기력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만 것이다. 그래서 한 축으로 '시민자산화' 전략을 조심스럽게 추진하고, 다른 축으로는 시민의 영향력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심을 두게 되었다.

<서대문지역>

- 자신의 개별 세력을 형성하고 이를 공동의 이벤트(행사 또는 이슈대응)로 엮어가는 기획이 부재했던 게 중심세력을 형성하지 못한 원인. 즉 자기 역량이 준비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에 맞는 행동이 기획되어야 한다는 점
- 그러한 바탕이 부족한 상태에서 행정의 지원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즉 지역사회로부터 자연스럽게 형성된 권위가 충분하지 못하였을 때는 곧바로 크고 작은 공격을 받음

<은평지역>

- 차근차근 자기 역사를 구축하고 성장한 풀뿌리 활동의 전형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마포지역과 달리 '열린사회은평시민회'는 곧바로 동단위 지역사회에서 자기 활동을 전개하기 시작한다. 마포는 공동체(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끼리끼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면, 은평은 지역사회(커뮤니티)에 초점을 맞춘 '드넓은 바다'로 뛰어든 것.

끝.

서대문협치의 가능성과 한계

협치지원관 손정기

맨처음 이 발제를 제안 받았을 때 먹먹했습니다. 시민사회영역 활성화 만약 제가 그 방법을 안다면 한국의 알린스키가 되어 있지 않을까요? 고민 끝에 제가 활동하고 있는 서대문협치가 걸어온 길을 설명하고 거기서 문제점 혹은 배울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서울시 청년혁신활동가 사업을 통해 서울복지재단의 ‘소지역중심복지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화곡마을살이’, ‘쌍문마을살이’ 등에서 마을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마포구를 중심으로 한 청년회 활동을 통해 청년권익, 도시농업, 지역봉사, 참여예산 등 다양한 활동을 경험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2019년 2월 서대문구 협치지원센터에서 협치지원관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협치지원관으로 오기 전 3년여 간 경험했던 마을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개인적으로는 큰 무기력감을 느꼈었습니다. 주변 지인들에게는 이렇게 표현했었습니다. ‘모래를 주먹으로 쥐는 것 같았다. 세게 쥐든 약하게 쥐든 모래는 손가락 사이로 계속 빠져나간다. 그런 기분이었다.’

마을 구성원들의 욕구를 확인하고, 그 안에서 공통된 의제를 확인하여, 주민리더를 세운다. 주민리더를 통해 사람을 모으고, 조직화된 힘으로 마을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지역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지역운동의 일반적인 방법론은 배울 때는 타당한 이론처럼 보였지만, 현실 속에서 실천할 때는 너무나 어려운 명제였습니다. 어렵게 결심한 리더분들이 사소한 문제로 그 뜻을 접을 때마다 마음속으로는 회의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때 제게 다가온 것이 바로 ‘주민참여예산’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자신들에게 쓰여질 예산을 편성하고, 의견을 낸다는 주민참여예산은 제가 고민하던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였습니다. 제게 예산은 곧 권한으로 읽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주민참여예산’ 관련 활동을 하다가 연이 닿아 서대문구에서 협치지원관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서울시 참여예산 이름으로는 구단위 계획형 주민참여예산이라 불리며, 각 자치구에서는 3년마다 ‘민관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혁신계획’을 수립하며, 각 자치구별 협치위원회를 최종의결기구로 하는 ‘협치’는 한마디로 설명하기 힘든 제도입니다. 기존 주민참여예산의 한계라 지적되어 왔던, 속의를 강화하고 예산 칸막이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서 의제를 중심으로 민과 관이 뭉칠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입니다. 그렇다보니 ‘협치’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민간’은 단순히 욕구를 가진 주민이 아니라, 행정의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회의 안에서 행정을 설득할 수 있는 소위 ‘역량’을 갖춘 민간영역이 있어야 합니다. 실제로 ‘협치’가 잘 이뤄진다는 지역구들은 대부분 기존 자생적으로 조직된 시민사회 영역이 존재하는 자치구들이었습니다. 은평구, 도봉구, 관악구, 성북구 등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서대문구는 앞서 열거했던 자치구와는 좀 상황이 달랐습니다. 초반부터 주민참여예산 활동을 했던 약한 결속력을 가진 ‘서주참’이 있었던 탓에 빠르게 구단위계획형을 받아들였지만, 행정의 카운터 파트너를 담당할 시민사회 조직이 없었습니다.

서대문구는 원활한 협치 사업 추진을 위해 상당히 도발적인 방법을 시도했습니다. 대부분의 자치구가 선택한 기능분과를 통한 협치사업 추진이 아니라, 의제별로 분과를 만들어 그 분과별로 의제를 속의 공론하고, 운영의 전반에 관한 사항은 각분과장님 및 협치 관련자들로 이뤄진 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민간사무국을 두어 각 분과 및 실행조직인 워킹그룹의 운영을 지원하고 촉진하는 역할을 맡겼

습니다. 각 분과별로 의제발굴 및 민간분과위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을 수시로 실시하고, 분과회의도 월례로 개최하여 민간분과위원이 회의에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대문구는 행정이 직접 시민사회영역을 조직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습니다.

도전적이라면 도전적이라 할 수 있고, 다르게 생각하면 교육지책이라 할 수 있는 서대문의 시도는 나름 효과를 보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한 협치 민간사무국장 및 협치 지원관 그리고 서대문협치 각 분과장을 중심으로 한 운영위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협치의 외형을 갖추는데 성공했습니다. 2018년에는 10개의 의제를 실행했고, 2019년에는 13개, 2020년에는 더 많은 의제를 발굴하여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19년만 본다면 4회의 분기별 협치회의, 12회의 협치 운영위원회, 76회의 분과위원회, 231회의 워킹그룹 회의가 진행되었습니다. 활동가를 발굴하고, 활동가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도 빠지지 않고 진행되었습니다. 분과별로 분과 촉진가를 선발하여 회의가 더욱 원활이 진행되도록 지원했습니다. 각 동별로 동주민 참여예산위원회를 촉진하기 위한 촉진가도 선발하여, 동별로 활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참여예산과 협치에 대한 지식을 갖춘 주민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서대문 협치의 노력은 결과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습니다. 협치를 통해 촉진가 활동을 한 분들이 동자치회 지원관이 되거나 간사 역할을 수행 하는 등 지역활동가를 탄생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행정내부에서도 협치에 대한 인식이 뚜렷이 좋아지기 시작했으며, 자발적 동참까진 이르진 못했지만 협치와 함께 하는 것에 대한 부담, 두려움은 뚜렷하게 줄어들었습니다. 서대문 협치가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많은 주체들이 협치와 함께 했고, 협치회의 또한 조례개정을 통해 종래 구청장, 민간공동의장 체제에서 구청장, 구의회 의장, 민간공동의장의 민·관·의회가 모두 관여하는 위상이 높은 위원회가 되었습니다. 협치 주관부서도 기획예산과에 협치지원팀으로 있었지만 민관협치과가 신설되었고, 협치지원팀, 참여예산팀, 자원봉사팀 등 협치가 절실히 필요한 부서를 모아 소속으로 두었습니다. 서대문 협치는 확실히 성과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대내적으로 대외적으로 서대문 협치가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서대문 협치의 앞길에 꽃길만 있을까요? 예전 학교에서 소설의 구성단계를 발단-전개-위기-절정-결말 5단계로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서대문 협치는 소설로 친다면 전개 부분의 끝자락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서대문 협치가 성과를 내며 쉽 없이 달려오며, 신경 쓰지 못한 한계점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제가 서대문의 도전에 대해 도전적이다, 혹은 교육지책이다라는 표현을 쓴 이유이기도 합니다.

분과 칸막이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본래 서울시가 구상한 협치의 운영 이론은 지역사회의 문제를 진단하고, 의제를 찾아내는 것은 지역의 시민사회 영역의 몫이고, 협치는 그 문제해결을 위한 실행논의의 테이블역할을 하도록 권고해왔습니다. 그에 비해 조직된 시민사회영역이 거의 없었던 서대문은 어쩔 수 없이 지역의 문제를 진단하고 의제를 숙의하기 위해 의제별 분과를 조직했습니다. 경제산업, 교육문화, 기후환경, 보건복지, 보육, 제도행정의 6개 의제별로 사람을 모으고 숙의하여 의제를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이다 보니 민간의 상상도 각 분과이름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협치의 시작 이유 중 하나인 부서 칸막이를 민간이 스스로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서대문 협치의 구조적인 문제인 것입니다.

또 다른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바로 서대문 협치 운영위원회의 과도한 업무 부담입니다. 본래 타 자치구처럼 기능분과로 조직했다면 분과별로 나누어 수행했을 기능들이, 의제별 분과로 조직한 탓에 실무적 기능들이 모두 운영위원회로 몰렸습니다. 각 분과장님들을 비롯한 민간협치사무국 협치지원팀에 지워지는 업무의 양이 해가 갈수록 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말했던 분과 칸막이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융합의제를 논의 할 단위를 운영위 산하 TFT로 만들면서 운영위원회의 업무만 더 늘어난 꼴이 되어버렸

습니다. 그에 비해 본과의 역할은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대문 협치가 활성화 될수록 의제발굴보다는 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사업실행이 강조되기 시작했고, 분과회의는 각 분과에서 도출한 의제 실행주체인 워킹그룹의 활동내역을 보고 받는 역할로 축소되기 시작했습니다. 분과민간위원의 역량강화도 추진해야 할 주제인 분과장 및 협치 민간 사무국이 의제실행에 짓눌리기 시작하면서 역량강화를 위한 각종 사업실행이 약화되고 줄어들어버렸습니다. 또한 현재의 코로나 시국도 이 문제를 가속시켰습니다.

협치의 힘으로 조직된 시민사회 영역을 탄생시키지 못했습니다. 서대문 협치도 앞서 이야기한 두 가지의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문제를 인식하고, 의제분과에서 기능분과로의 전환을 검토했습니다. 그러나 고민하면 고민할수록 의제별로 모여 있는 민간위원들 기능분과 전환 후에도 똑같이 협치라는 테두리로 모여 있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컨설팅을 의뢰하기도 했고, 유명한 연구원을 모셔 의견도 들어봤지만 도저히 대책이 수립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현 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서대문 협치가 주민을 조직했지만, 시민사회영역을 탄생시키지 못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민간위원들 간에 역량차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본과의 역할이 축소되면서 굳이 이름을 붙이자면 협치 핵심관여 계층과 저관여계층으로 나뉘기 시작했고, 그 사이에 역량의 차이가 가지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의제별 분과라는 서대문 협치의 구조적 문제, 워킹그룹회의와 운영위원회는 일과시간에 진행되고, 분과회의는 주로 퇴근 이후 저녁시간에 진행되다 보니 직장이 있는 주민들은 워킹이나 운영위 등 협치에 핵심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회의 참여가 매우 제한되었습니다. 분과장님들 및 운영위원분들은 어디서든 지역활동가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했지만, 분과회의에만 참여하는 위원님들은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협치 핵심관여층은 서대문 협치의 논의가 더 고도화되길 바라고, 그만큼 저관여계층이 참여하기 어려운 환경이 되고 있습니다. 서대문협치는 올해 사업 진행을 위한 워킹구성부터 워킹위원들을 공모하고 심사하여, 선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몇 번 반대의사를 표명했지만, 논의가 고도화되기를 원하는 협치 리딩그룹의 의지가 강했습니다.

서대문협치는 민간에게 협치에 성실히 임한 대가를 치를 수가 없습니다. 서대문협치에서는 매년 12월 성과공유회를 실시합니다. 한해의 협치성과를 되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서 1년 동안 서대문 협치를 위해 노력한 분들을 뽑아 상을 드립니다. 행정 공무원들에게는 표창과 그에 따른 성과, 포상금, 해외연수의 기회까지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민간에게는 선거법이라는 굴레 탓에 단지 표창장 하나만 드리게 됩니다. 또한 회의 전/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시간을 낸 민간위원들에게 식사를 대접하려 해도, 1인당 8,000원이라는 법적 근거도 명확치 않은 기준에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서대문협치의 구조적 문제 탓에 서대문협치 운영위원들이 협치를 위해 할애하는 시간은 정말 상당합니다. 그러나 서대문협치는 그분들에게 보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는 결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서대문은 협치라는 씨앗이 뿌리를 내리기 쉬운 토양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꽤나 힘차게 줄기를 뻗었고 잎새를 틔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 비해 뿌리는 깊지 못했습니다. 서대문협치는 거센 도전 앞에 직면해 있습니다. 앞으로 이 도전이 어떤 결과를 나올지 어떤 예상도 할 수가 없습니다. 큰 변화의 지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초기부터 협치를 위해 노력해온 분과장 및 민간공동의장도 이제 내년이면 연임이 불가능해집니다. 서대문협치의 한 핵심축이었던 조정관도 내년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앞으로 서대문협치 앞에는 너무 많은 일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역경을 잘 헤쳐나가길 바랍니다. 마무리하면서 서대문 협치가 겪은 일을 바탕으로 서대문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한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 질문의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앞선 주민과 뒤에 선 주민

지역 어디에서나 앞선 주민과 뒤에 선 주민 사이에 긴장이 형성되게 마련입니다. 앞선 주민은 계속 발전하길 바라고, 뒤에선 주민은 따라가다 포기하고 외면해버리곤 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서울시가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주민자치회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든 모두 제2의 주민자치위원회가 될 뿐입니다.

권한은 어디서 오고 책임은 어디로 가는가.

협치만 해도 의제는 민간이 만들 수 있지만 결국 집행의 책임은 행정에 귀속되어 버립니다. 워킹그룹이라는 회의체로 결정을 해도 혹시라도 예산 관련해서 사고가 생긴다면 책임은 담당할 주무관에게 가버립니다. 결국 워킹그룹에 참여한 권한과 책임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는 또 다른 의미로 워킹그룹이 아무리 설득한다 한들 담당 부서가 허락하지 않는 한 사업을 진행될 수 없음을 뜻하기도 합니다. 권한도 워킹그룹 혹은 협치에서 와야 하고, 책임도 협치로 가야합니다. 그런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제대로 된 협치는 요원할 것입니다.

지역사회혁신계획의 성과는 무엇을 평가해야 하는가.

서울시의 구단위계획형 사업 수행의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사회영역 저변확대를 협치의 주요 목표보다 협치를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달성되어지는 중간단계정도로 생각하는 듯합니다. 물론 여러 비판 앞에 선 서울시를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설픈 시민사회 저변확대와 지역문제해결 모두를 노리다가는 둘 다 놓칠 수도 있습니다.

협치를 경험한 주민들을 조직화 시킬 수 있는가.

서대문구가 협치를 통해 단순히 협치라는 이름으로 사람을 모아 놓은 들 조직된 시민사회는 탄생하지 않았습니다. 이 주민들을 조직시킬 수 있는 명제나 의제가 절실히 보입니다.

사람을 어떻게 남길 것인가.

서대문협치 민간사무국은 여러 요인이 있었지만 사무국이 시작된 이래로 사무국장이 두 번이나 바뀌었습니다. 사무국장의 채용, 근무 평가, 인사 관련 모든 절차는 협치지원팀의 영향력이 절대적입니다. 민간의 대변자여야 할 협치 민간사무국이 협치지원팀의 영향력 아래 눌러있는 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대문협치 전문가가 탄생하리라고 생각하기 힘들 것입니다. 지역활동가들에게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해 보입니다.

2020년대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몇 가지 단상

박준우(함께하는 시민행동 운영위원)

1.

최근의 시민사회운동을 돌아볼 때 가장 중요한 풍경 중 하나는 역시 지난 10년간 진행되어온 '민주당 정부-시민사회운동 사이의 협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에서 몇몇 진보적 성향의 구청장들의 당선과 함께 태동되었던 이 움직임은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장 당선 이후 본격화되고 전국적으로 확산되었으며, 문재인 정부의 출범 이후 중앙정부 차원에서까지 수용되어 하나의 큰 흐름으로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전후로 이 '협치'는 몇 가지 점에서 기로에 서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2021년 서울/부산시장(어쩌면 경남도지사까지도 포함) 보선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약 1년 남짓한 기간 동안 중앙 및 지방정부의 권력 지형에 전면적인 변화가 발생합니다. 둘째, 이 흐름의 가장 강력한 매개자였던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셋째, 역설적이게도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하면서 전통적인 민주당의 지역 세력들이 권리 주장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섹터에서의 권력지형 변화로 인해 2020년대의 시민사회의 풍경은 2010년대의 풍경과는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10년간의 '협치'를 통해 수많은 긍정적인 변화가 발생했지만, 무시 못할 부작용도 하나 나타났습니다. 시민사회운동 내 각 영역과 행정 간의 관계는 심화된 반면, 시민사회운동 내 영역들 간의 관계는 약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협치'만이 그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시민사회운동 내의 연대가 취약해지는 상황에서 '협치' 프로세스에 참여하게 되면서 그 취약성이 더 증폭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각각의 영역에서는 자원의 확보, 영향력의 증대 등 긍정적인 변화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민사회운동에 대한 외부의 공격에는 더 취약해질 우려가 있습니다. 사실 시민사회운동이 지역 토호들과 다른 것은 연대한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지역 토호세력들은 이권 앞에서 단결하지 않습니다.

3.

연대, 그리고 연대를 넘어 서로 경계를 넘어서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시민사회운동의 여러 의제들, 영역들을 각각의 의제로, 영역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의제로, 삶의 원리와 방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참여예산을 행정의 예산 편성에 참여하고 배분받는 제도로만 이해하면 영역의 논리에 갇히고 운동 내부에도 행정처럼 칸막이가 만들어집니다. 사실 참여는 우리가 공적 삶을 사는 원리이고 예산은 행

정만이 아니라, 우리 삶터와 일터 모든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여예산은 어느 한 운동 영역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을 민주적, 대안적으로 변화시키는 원리가, 시민사회운동의 공통의 이해의 기반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여성, 환경, 민주시민교육, 의정, 행정, 조세, 복지, 문화/체육 등등 모든 의제와 영역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전국단위 단체들은 전문성에 더 치중하게 되는 조직 논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역에서 지금 운동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구성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4.

전국단위에서든 지역단위에서든 시민사회운동은 80년대 운동 그와 연관된 일부 전사(前史)에 뿌리를 두고 스스로를 이해합니다. 80년대 운동의 정신은 물론 더없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사람과 영역을 구분하는 경계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80년대 운동과 무관하게 발전해온 여러 영역들(예를 들면 국제협력이나 사회복지, 그리고 몇몇 직능단체 등)의 성과를 포괄하고 담아내는 것도 필요한 일입니다. 90년대생 이후의 세대와 함께 고민하기 위해서 더욱 필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서울시 권역NPO지원센터 추진현황과 서북권NPO 몇 가지 과제

민성환(생태보전시민모임 공동대표)

1. 서울시 권역NPO지원센터 추진현황⁴⁾

2018년, 서울시는 각 지역의 이슈를 도출하고, 지역단위의 특화된 발전과 더불어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30 서울생활권계획」을 발표하였다. 「2030 서울생활권계획」은 서울 전역을 5대 권역 생활권⁵⁾과, 116대 지역 생활권으로 재구성하고 각각의 목표와 실천전략을 수립했다. 권역생활권은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범위를 의미하며, 도심, 동북, 서북, 서남, 동남으로 나뉜다. 지역생활권은 통근, 통학, 쇼핑, 여가 등 주민의 일상적인 생활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적 범주를 말한다.⁶⁾

권역은 각각의 지역사회 여건과 당면 과제가 다르며, 시민사회 형성의 토대와 역사, 그리고 현황이 상이하다. 따라서 권역별 특성에 기반한 현장밀착형 시민사회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력을 증진하기 위해 시민사회 간의 교류와 협력이 절실하다는 문제의식이 지역시민사회에서 확산되고 있다.⁷⁾ 2019년, 권역NPO지원센터(이하 권역센터)가 추진되지 않은 동북1권, 서남권, 서북권 NPO지원체계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결과, 3개 권역 시민사회 모두 지역의 시민사회와 공익활동 주체들을 지원하는 권역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필요성에 공감하였다.⁸⁾

서울시는 민선 7기 시정계획(2019~2022년) 중 ‘사회적 가치와 공익증진을 위한 시민사회 성장지원’의 세부 추진과제의 일환으로 지역시민사회의 지속가능한 성장지원을 위한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계획을 수립하였다.

[권역NPO지원센터 설립 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민선 7기 시정4개년 계획(2019~2022년 / 권역·자치구 NPO지원체계 확대)

4) 서울NPO지원센터 자료

5) 도심권, 동남권, 동북권(동북1권, 동북2권), 서북권, 서남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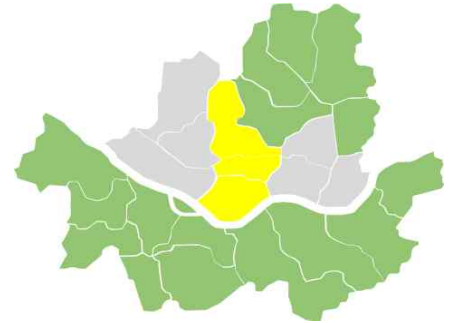
6) 서울생활권계획 <https://planning.seoul.go.kr/plan/main.do>

7) 박영선 외, 2020, 2019 중간지원조직 공익활동 역량 강화방안

8) 서울시NPO지원센터 웹사이트 아카이브(http://www.snpo.kr/bbs/board.php?bo_table=npo_aca)에서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의제를 다루는 공익활동의 거점을 생활권 내에 조성하고자 하는 권역 시민사회의 수요와 의지, 조성 여건 등을 고려해 2018년 동북권NPO지원센터, 2020년 동남권NPO지원센터를 설립하였고, 2021년 서남권NPO지원센터를 추가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상기한 바와 같이 2020년, 「서울특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에 권역센터의 설치를 추가하여, 권역센터 설립·운영의 제도적 근거를 강화하였다.

구분	센터명	수탁기관명	설립연월
광역(노란색)	서울시NPO지원센터	(사)시민	2013. 11.
권역(녹색)	동북권NPO지원센터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	2018. 6.
	동남권NPO지원센터	(사)커뮤니티공감허브	2020. 3.
	서남권NPO지원센터	-	2021. 초 예정



<표 1. 광역/권역센터 목록>

<그림 1. 광역/권역센터 지도>

※ 권역센터 미추진 권역(회색): 동북1권, 서북권

※ 서울시는 5대 권역으로 구분되지만, 동북권의 경우 동북1,2권으로 다시 나뉜다. 동북권NPO지원센터는 그 중 동북2권에 해당한다.

구분	동북권NPO지원센터	동남권NPO지원센터
설립형태	관설민영(민간위탁 운영방식)	
지역범주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5개구)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강동구(4개구)
위치	서울시 도봉구 노해로 69길 21 두승빌딩 201호 ↳ 2020년 창동 '세대융합형 복합시설' 입주 예정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215, 3층
수탁기관	(사)강북풀뿌리활동가포럼(약칭, 강풀포럼)	(사)커뮤니티허브공감
상근인원	5명	5명
조직구성	네트워크지원팀, 교육홍보팀, 운영팀	네트워크지원, 홍보기획, 교육기획, 회계·총무

권역센터는 현장과 지역의 의제에 초점을 맞춘다. 지역시민사회단체와 활동가를 지원하고, 지역사회문제를 발굴, 해결하는 과정을 지원한다. 또한 권역 내 인적·물적 자원과 다양한 영역의 교류 및 연대를 촉진한다. 권역 내 자치구 간 협력 및 협치지원, 자치구 내 영역별 중간지원조직 간 협력지원, 구 단위 NPO지원체계 지원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권역센터는 이러한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지역사회 문제해결과 협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권역 시민사회의 성장과 활성화를 도모한다.

2. 서북권NPO지원센터 관련 몇 가지 이슈

- 위탁주체를 누구로 할 것인가?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어디에 조성할 것인가?
- 공간구성은 어떻게 할 것인가?
- 비전과 핵심미션을 무엇으로 할 것인가?
- 시민사회의 재정적 기여는 필요한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 마포-서대문-은평 시민사회 연대와 협력역량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
- 세 시민사회 발전 경로, 현 환경이 다른데 이를 어떻게 해석하고 의제로 수용할 것인가?
-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 과제는 무엇인가?
 - + 기후위기, 전환마을(도시), 자원순환경제, 공동체돌봄, 마을전환교육공동체
- 지방선거와 대통령선거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 + 그린뉴딜, 전환의 시도는 실제로 2023년부터 본격화될 것 같은데...2년의 준비기간
-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의 변화를 어떻게 추동하고 연결할 것인가?
 - + 마을단위까지 NPO 영역과 범위를 확장할 필요성

2020 제5회 은평상상콘퍼런스('20.9.8~20.12.4)

감염병과 기후위기시대를 넘어서, 새로운 세상을 향한 은평시민사회 공동선언문

은평시민사회는 2020년 9월 8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20 제 5회 은평상상콘퍼런스- ‘10년의 꿈 상상하기’』를 진행하였습니다.

우리 삶을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코로나19 팬데믹은 잠잠해지나 싶더니 3차 유행으로 치닫고 있고, 이보다 몇 배 이상 무섭다는 기후위기는 시시각각 우리 목을 옥죄어 오고 있습니다.

은평시민사회는 2019년 10년의 꿈-되돌아보기로 걸어온 길을 반성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 올해는 새롭게 만들어나갈 세상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현 상황이 위기이기 때문에 그 위기를 극복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지혜가 더욱 더 필요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맞이할 세상이 지금과 전혀 다른 세계일 것이라 상상합니다. 아니, 그런 미래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담대하고 급진적인 도약이 필요하고 전면적인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린뉴딜, 로컬뉴딜을 통해 구체적인 삶의 현장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맞이할 그 세상은 적어도 기후위기를 넘어선 사회여야 합니다.

또한, 상호호혜와 우애의 공동체인 돌봄 공동체라야 합니다. 코로나19를 통해 우리는 현재의 돌봄이 얼마나 취약한지, 불평등한지, 정의롭지 못한지 절실하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런 사회는 지속불가능 합니다.

이런 사회는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의 자발적 성찰과 가치의 변화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모든 공동체가 지구 시민으로 함께 변화하고 성장하기 위해서 마을교육공동체를 상상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현재 서 있는 자리와 역할, 다루는 주제가 서로 다르지만 10년 동안 만들어갈 미래 지역사회의 핵심 가치가 기후위기극복, 상호호혜와 우애의 돌봄공동체, 자발적 성찰과 성장의 마을교육공동체임을 확인하며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1. 은평시민사회는 「전환도시 은평」 만들기를 위해 공동으로 비전을 수립하고 연대하고 협력한다.
2. 각 단체와 기관은 개별의 고유한 의제와 활동 속에 기후위기극복, 돌봄공동체, 마을교육공동체가 갖는 지향과 가치를 녹여내기 위해 노력한다.
3. 각 단체와 기관의 활동가는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 마을주민의 일원으로서 함께 참여하고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며, 단체와 기관은 이러한 활동가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지원한다.
4. 은평시민사회는 기후위기, 돌봄, 마을교육 뿐만 아니라 노동, 마을, 문화, 먹거리, 분권, 복지, 사회적경제, 생태환경, 숙의공론, 에너지, 인권, 여성, 자원순환, 자치, 장애인, 전환마을, 청년, 협동조합, 협치 등 은평시민사회가 다루는 제 의제의 가치실현과 지역사회 변화를 위해 서로 지지하고 연대하고 협력한다.
5. 은평시민사회 각 단체와 기관은 위의 선언의 이행 정도를 매년 자발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차기 활동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한다.

2020. 12. 4.

2020 제5회 은평상상공퍼런스추진위원회와 시민사회

(사)열린사회시민연합 은평시민회, (사)은평상상, (사)터울림, (재)은평문화재단,
구립은평마을방과후지원센터, 마을엔, 마을예술창작소 별별곳간, 물푸레생태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은평사회혁신기업네트워크,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생태보전시민모임,
서부장래인종합복지관, 서울혁신센터, 소통이룸협동조합, 우리동네땀발협동조합, 은평 1.5°C위원회,
은광지역아동센터, 은평교육콘텐츠협의회, 은평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은평구마을공동체지원센터,
은평구사회적경제허브센터, 은평구평생학습관, 은평기후환경연대, 은평노동인권센터,
은평도서관마을사회적협동조합, 은평도시농업네트워크, 은평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은평마을돌봄친구들, 은평마을작은도서관네트워크, 은평시민신문협동조합, 은평신용협동조합,
은평아동청소년네트워크, 은평여성네트워크, 은평인권네트워크, 은평지역아동센터연합회,
은평청년정책연구소, 은평협동조합협의회, 장애인이살기좋은은평을만드는사람들, 전환마을은평,
재미난장, 지역연구협동조합 즐거운상상, 태양과바람에너지협동조합, 협동과연대

2020년

서북권 시민사회 네트워크 협력 사업 결과보고서

발행일 2020년 12월 4일(SNPO 2020-B-006)

발행처 서울시NPO지원센터

주 소 (04523)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9길 39 부림빌딩 1, 2층

전 화 02-734-1109

전 송 02-734-1118

메 일 contact@snpo.kr

홈페이지 <http://snpo.kr> www.facebook.com/seoulnpocenter

이 저작물은 국제라이선스 CC BY- NO - ND (크리에이티브 거먼즈 저작자표시 - 비영리 - 변경금지) 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NPO지원센터는 서울특별시와 사단법인 시민이 협력하여 운영합니다.